조계종연구소 “전문인력 확보 시급”

8월 19일, 싱크탱크 역할 모색
중장기 종책·현안 연구 등 제시
이명호 발제·묘장 스님 등 토론
“연구결과 종책화 환류체계 제도화”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연구소는 8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종단 싱크탱크로서의 종책연구 방향과 실행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계종연구소(소장 원철 스님)가 종단의 미래 정책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인력 확보와 함께 연구 결과를 종책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계종연구소는 8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종단 싱크탱크로서의 종책연구 방향과 실행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재영 성철선사상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계종연구소가 종단 싱크탱크로서 수행해야 할 연구의 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운영체계 등이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이명호 인드라망연구소장은 ‘조계종연구소는 어떤 연구를 해야 하는가: 종단 싱크탱크로서 종책연구의 방향과 실행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종단 싱크탱크로서 조계종연구소가 어떤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체계를 갖춰야 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소장은 종교단체의 정책 개념과 유형, 정책연구와 정책개발의 일반 원리, 종교단체의 조직 성격에 따른 종책개발 방식의 차이 등을 살펴본 뒤 종단 종책연구의 현재 구조와 한계를 분석하고 연구소의 연구 방향과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이 소장은 조계종연구소의 연구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종단 정체성과 중장기 종책연구다. 종단이 계승해 온 한국불교의 역사와 수행 전통을 오늘의 조건 속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단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다.

둘째는 조사·통계·데이터 기반 종책연구로, 종단 내부의 현황과 사회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증거에 기반한 종책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사회 현안과 대사회적 의제연구다. 불교가 지닌 가치와 지혜를 오늘날 사회가 겪는 고통과 공공문제에 응답하는 연구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이 소장은 연구 방향을 실제 종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지원 중심의 연구소에서 벗어나 연구수행 중심 조직으로 정비하고 상근 연구인력과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결합한 인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소장은 “연구 방향이 구체적인 연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행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연구과제의 기획부터 조사와 통계 관리, 외부 연구의 품질관리, 종책화와 환류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전문 연구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 결과가 총무원 각 부서와 종무회의, 중앙종회를 거쳐 종책으로 연결되고 교구본사와 말사 현장에서 실행된 뒤 다시 연구소로 환류되는 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단 내부와 외부 전문가, 교구 현장, 학계와 시민사회를 잇는 협력 네트워크와 함께 연구 결과물 및 연구소 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종책 분석 역량은 조사·통계·데이터 기반 연구로, 종책 운영 역량은 종무기관과 교구본사·말사의 연계로, 종책 조정 역량은 종무회의·중앙종회·교구 현장 간 환류 구조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 소장은 현재 종단 종책연구의 구조적 한계로 연구기능의 분절과 지속성 부족, 전문 연구인력 부족, 조사·통계·데이터 기반의 취약성, 정책 환류체계 부족, 협력 네트워크 미정립 등을 꼽았다.

이 소장은 “조계종은 장자종단으로서 한국불교와 한국사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제시할 책무가 있다”며 “이런 엄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소 설립이라는 제도적 출발을 넘어 실질적인 싱크탱크로 기능할 수 있는 연구 역량과 실행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 종단적 위상, 사회적 소통과 공적 역할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묘장 스님이 ‘조계종연구소의 조직구성과 운영체계’를, 동국대 WISE 책임교수 법장 스님이 ‘조계종연구소의 종단적 위상과 역할’을, 성해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사회적 소통과 공적 역할’을 주제로 토론했다.

첫 ‘올해의 명상인 상’ 후보자 공모

‘2026 세계명상의날’ 기념
명상 대중화 기여 개인·단체

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26 세계명상의날’을 기념해 명상의 대중화와 가치 확산에 기여한 이들을 격려하고자 ‘2026 올해의 명상인 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9월 17일까지로, 명상 대중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직접 지원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후보자는 주요 활동과 업적, 명상 대중화 및 가치 확산에 기여한 내용 등을 후보자 추천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공적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이메일(0mi1995@wehago.com) 또는 우편(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2층 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 사무국)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올해의 명상인 상’을 제정했다. 명상이 개인의 치유와 수행을 넘어 사회적 공감과 연대로 확산되고 있는 데 주목해 다양한 분야에서 명상의 가치를 알리고 확산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조명한다는 취지다.

‘세계명상의날’은 2024년 12월 유엔(UN) 제79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정된 국제기념일이다. 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는 명상의 가치에 공감하는 국내 단체와 개인들이 뜻을 모아 2025년 출범했으며, 매년 세계명상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명상에 대한 관심은 종교와 이념, 세대를 넘어 확산하고 있다. 올해 4월 서울에서 열린 ‘2026 국제선명상대회’에는 약 5만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2030 청년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 같은 명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개인과 단체 부문에서 명상의 가치를 확산한 활동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 시상식은 12월 20일 열리는 ‘2026 세계명상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 홈페이지(www.seonmeditatio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내영 기자

1면에서 이어짐

환경·남북 등 사회적 과제 대응
차별금지법·종교편향 장기 종책

불교문화 정책 전환

불교문화 정책 역시 새로운 전환이 요구된다. 사찰음식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무형유산 보호, 비지정 성보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 등 불교문화의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특히 사찰이 보유한 문화유산을 종단과 개별 사찰만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공문화자산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지역 문화기관과의 협업 등도 차기 집행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다.

기후위기·환경문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불교의 생명존중과 연기적 세계관은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다. 특히 사찰과 산림, 수행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불교 내부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생태환경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차기 집행부는 사찰의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사찰 조성, 생태교육, 일회용품 감축, 사찰림 보전 등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 나아가 불교계 환경단체와 사찰,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전국적인 불교 환경운동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북불교 교류 재개

남북불교 교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불교문화유산과 인도적 지원조차 막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강산 신계사 복원으로 상징되는 남북불교 교류의 경험을 계승하고, 북한에 산재한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 역시 국내외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재외동포사회 등 다양한 채널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종단 차원에서 남북불교 교류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민간 차원의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축적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조계종은 그동안 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차별과 혐오가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불교의 자비와 평등 사상을 사회적 실천으로 구현하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불교계가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온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 연구 등 입법 사례와 사회적 합의 과정 등을 연구하고 정부 및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불교적 관점에서 차별과 혐오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는 불교의 기본 가르침을 오늘의 사회문제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종교편향 대응

종교 간 갈등이나 종교편향 논란이 발생할 때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의 종교 중립 원칙을 점검하고 종교편향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교평화위원회가 제안한 ‘종교 간 차별 점검 TF’와 같은 기구를 공식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서산 해미읍성, 홍성 홍주읍성과 같이 특정 종교 중심으로 성지화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별취재팀

기호 2번 정념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

종도들의 여망을 받들어
불교중흥에 진력하겠습니다



정념스님 선거대책위원회